

## Online Series

2016. 02. 04. | CO 16-05

# 북한의 비핵화가 본질이다

조한범(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4차 핵실험, 북핵위협의 고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수소폭탄실험 여부는 미지수이나, 핵탄두 소형화와 부분적 핵융합기술의 획득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실전배치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기술의 확보 여부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직후 정부성명을 통해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례에 비추어 4차례의 핵실험은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4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사거리 300km에서 1300km에 이르는 스커드 및 노동계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한국 전역이 그 사정권에 들게 된다.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포동 계열 장거리 로켓의 경우 시험단계이며 현재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실제적 위협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북한 핵 위협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한국의 안보가 북핵위협의 창끝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 소련은 디젤잠수함 골프급의 함교에 SLBM 3기를 탑재했으며 북한은 이 기술을 응용하여 신포급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소련 붕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치가 부착된 상태의 골프급 잠수함 여러 척을 고철 형태로 도입한 바 있다. 북한이 건조중인 신형 신포급잠수함은 골프급보다 소형이지만, 최소 SLBM 1기의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SLBM 실험은 건조중인 신포급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의 바지선 형태의 시설에서 미사일을 사출하여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의 획득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시험발사 없이 실전배치했으며, 이는 구 소련의 SLBM인 R27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무수단과 북한이 최근 시험한 SLBM 북극성은 유사한 모델이다.

따라서 북한이 무수단을 SLBM 북극성으로 개량했으며, 신포급잠수함의 건조완료와 동시에 시험발사 없이 SLBM을 실전배치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군사적 상식과 거리가 멀지만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안보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기술을 확보했다면 SLBM인 북극성에 장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포급잠수함이 SLBM을 장착해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형 첨단 핵잠수함에 비견될 수 없으나 그 자체로 한국의 킬체인과 사드의 억제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한국의 안보가 우선이다

미국은 위기때마다 B52 전략폭격기와 핵항모의 전진배치로 한반도에 대한 방어의지를 과시해왔다. 4차 북핵실험 이후에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드의 전진배치는 북핵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이지만, 문제는 방어수단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상황에 대응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대공방어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사드 모두 완벽한 요격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MD체제의 핵심은 가상적국이 선제 핵공격을 가해올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더 많은 공격력으로 적국을 초토화시킨다는 교리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와 같은 전장의 중심이 짧은 경우 이 같은 논리에 한계가 있다. 중심이 짧다는 점에서 탐지와 추적, 요격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동시 요격 대상도 한정될 수 밖에 없다. 한반도는 한발의 핵탄두로도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지정학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북핵위협에 놓인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방어 무기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두고 국내여론 및 미국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위협의 가장 직접적 대상은 한국이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소 이외에 완벽한 대안은 없다.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이나 사드배치여부가 북핵위기의 본질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논의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 한국의 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비핵화 이외의 완전한 해법은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 북핵위협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해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교역의 1/4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우방이다. 북핵위협의 직접적 대상인 한국의 안보위기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려울 때 도와 주는 것이 친구”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승절에 참석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한 한국의 판단과 고뇌를 존중할 일이다.

한국과 미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호흡을 같이 해왔으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한국인들은 핵을 가진 적대세력에게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수단은 핵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MD나 사드는 문자 그대로 미사일 방어체제이며, 이는 북한 핵위협이 현재화한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되는 논리이다. 사드가 북핵위기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배치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완벽한 미사일 요격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6자회담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해법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며, 이는 한국 안보의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가상적국에 대해 대량의 보복성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핵에 대응하는 것은 핵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상식을 보여주고 있다. 핵보복 능력은 가상적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전 배치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배치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북한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내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북핵위기 해소의 국제적 해법이 난망할 경우 한국내 자체 핵보유론의 확산을 막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국가든 차세대 지도자들이 국내정치적 요구의 유혹을 뿌리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국제질서의 현실상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바람직하지도, 국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위기 해법이 무력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내 자체 핵무장론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제질서의 책임있는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와 같이 북핵문제의 대응에 대한 미중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상황의 시급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적어도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신뢰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는 한국 지도자의 언급이 무슨 뜻인지를 진정으로 헤아려야 할 때이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